



보도 일시	2022. 1. 20.(목) 14:30	배포 일시	2022. 1. 20.(목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재정혁신국 재정제도과	책임자	과장 정남희 (044-215-5490)
		담당자	사무관 박재홍 (pjh10220@korea.kr)
			사무관 권준수 (junsu195@korea.kr)
			사무관 문혁완 (laza78@korea.kr)

## 「2022년 재정운용 심포지엄」 개최

### - 공공분야 ESG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-

□ 기획재정부는 1월 20일(목)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「2022년 재정운용 심포지엄」을 개최하였다.

○ 재정운용 심포지엄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재정투자방향과 재정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\*로 올해로 네 번째\*\*이다.

\* ('18년)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

('19년) 재정 효율성·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편방안

('20년) 재정 효율성·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

\*\* 금년 행사는 '21.12월 개최예정(오프라인)이었으나,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정 연기

□ 올해 심포지엄 주제는 코로나19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를 공공분야에 적용·확산하기 위한 '공공분야 ESG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'이다.

○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(1세션), 지역균형발전 재구조화(2세션), 재정사업 전달체계 개편(3세션)에 대해 세션별 전문가들의 발제·토론 이후, 온라인 참여자들의 질의·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.

\* ESG : 환경(Environment), 사회적 가치(Social), 거버넌스(Governance)의 약자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이며 최근 무디스는 ESG를 활용, 국가별 평가('21.1월)

## 심포지엄 프로그램

구분	주요내용
개회사	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
축사	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
세션 I	<b>Environment : 기후변화 대응 강화</b> ▶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방안
세션 II	<b>Social : 지역균형발전 재구조화</b> ▶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효율적 국토 활용방안
세션 III	<b>Governance : 재정사업 전달체계 개편</b> ▶ R&D 투자 융합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▶ 아동돌봄안전망 전달체계 개편안

- 이번 심포지엄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, 일반 국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(<https://url.kr/cOFZ3a>)의 실시간 중계(14:30~18:00)로 참여하였다.
-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현장에 참석하여 축사와 개회사를 하였다.

### ※ 세션별 주요내용은 참고

#### 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,

- 범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·저탄소 기반 경제·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ESG 가치를 적극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- 첫째,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이며, 그린뉴딜, 탄소중립 2050 전략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한편, 계층·지역·산업간 불가피한 산업·인력 구조전환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‘정의로운 전환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.

- 둘째, 인구·자원 등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격차 확대가 포용적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역균형 뉴딜과 지방소멸대응 투자, 초광역 협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균형 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하는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- 셋째,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여야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정책 수용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
  - 특히,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R&D 투자에 있어서는 민·관 유기적 협력, 산·학·연의 융합·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,
  - 우리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보육·돌봄에 있어서는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서비스 공급,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.

□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향후 재정운영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·실천해 나갈 계획이다.

<참고1>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요

<참고2> 세션별 주요내용



## 참고1

##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요

□ 일시 및 장소 : 1.20일(목) 14:30~18:00 /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

□ 진행방식 : 온라인 생중계(유튜브, 토론자 및 발제자만 현장참석)

\* 세션별 지정토론 후 온라인 참석자 질의응답 진행(사회자가 2-3개 질의 선별·대독)

□ 참석 : 국내 재정관련 전문가, 기재부 등

□ 토론주제 및 시간계획

시 간		내 용		사회자
14:30 ~ 14:35		개회사 (김재진,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)		원종학, 조세연
14:35 ~ 14:40		축사 (안도걸, 기획재정부 제2차관)		
(세션Ⅰ) 환경				
14:40 ~ 15:00	발제	□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방안 (김강원,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)		허경선, 조세연 아태재정 센터장
15:00 ~ 15:30	토론	김지효,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심성희,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 연구위원 정구형, 한국전기연구원 신산업연구센터장		
15:30 ~ 15:40	질의응답			
15:40 ~ 15:50	휴식			
(세션Ⅱ) 사회적 가치				
15:50 ~ 16:10	발제	□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효율적 국토 활용방안 (김정훈, 재정정책연구원 원장)		김현아, 조세연 재정정책 연구실장
16:10 ~ 16:30	토론	성은영,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 진종현,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		
16:30 ~ 16:40	질의응답			
(세션Ⅲ) 거버넌스				
16:40 ~ 17:00	발제	□ R&D 투자 융합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(최종화,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 본부장)		김현아, 조세연 재정정책 연구실장
17:00 ~ 17:20	발제	□ 아동돌봄안전망 전달체계 개편안 (강지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단장)		
17:20 ~ 17:40	토론	김혜원,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 최성은,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연구위원		
17:40 ~ 17:55	질의응답			
17:55 ~ 18:00	폐회사 (나주범,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)			원종학, 조세연

## &lt; 1세션 : 기후변화 대응 강화 &gt;

- 탄소중립이 글로벌아젠다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선언('20.12월), 탄소중립 시나리오('21.10월) 등을 마련·추진중이나,
  - 원활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재정지원체계 보완이 필요
-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·소비 양 측면을 고려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,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(공정한 전환)도 고려
  - ① (에너지생산) 기존의 발전설비 중심 투자를 보완하여, 전력 생산 이후 송전·저장으로 이어지는 계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,
    - 생산설비 구축 외에도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금·M&A 자금 지원 등을 통한 미래먹거리로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추진
  - ② (에너지소비) 전력 생산자의 효율적 연료 소비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개편 필요성
    - 효율향상의무화제도(EERS)\* 법제화를 통한 효율적 전력생산 유도 및 에너지 소비량 절감방안 마련
- \*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여 효율적 전력생산을 유도하는 제도
- ③ (통합적 재정지원)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열·전력·연료 등 에너지 유형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합하여 에너지 유형 간 합리적 경쟁을 유도
  - \* 통합제도 예시: RPS(전력) + RFS(연료) + RHO(열)→ 에너지통합 공급의무화
- ④ (공정전환) 석탄발전 등 고탄소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

## < 2세션 : 지역균형발전 재구조화 >

- 그간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 집중은 심화, 농촌인구는 지속감소 추세
  -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인구는 증가하고, 수도권 과밀은 교통체증, 집값상승 등 사회문제와 출산율 저하 촉진
  - 지방소비세 중심 재정분권은 소비세원이 풍부한 수도권에 재정력 집중을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제약하는 측면
- 전략적 균형발전 대안으로 ①초광역 협력 전략강화, ②지방소멸대응 맞춤형 정책마련 등 추진

### < 초광역 협력 전략강화 >

① 초광역협력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, 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 계정을 신설하고,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중 포괄 보조방식 비중을 확대

② ‘통합 경제권’ 내에서 경제활동 및 교육, 의료 등 원격활동에 대한 ICT 지원을 강화하고, 오지주민의 교통이동성 지원\*도 강화

\* 인구감소지역 학교 통폐합에 대응한 원거리 학생 교육여건 지원(기숙사, 교통 등)

### < 지방소멸대응 맞춤형 정책마련 >

③ 인구감소시대에 현실적 지방소멸 대안으로 지역자원, 입지, 역량 등을 고려하여 컴팩트 성장과 스마트 축소 전략을 구별하여 추진

\* (컴팩트 성장) 특화산업 기반이 있는 도시내 거점지구에 미래 성장 기반 구축  
(스마트 축소) 소멸위험지역은 기존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사업(생활 SOC 등)에 투자

④ 저출산 지원대책 수립시 수도권 청년 유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, 교부세, 포괄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\*를 통한 취약지자체 지원 강화

\* (중앙-지방) 교부세, 포괄보조금 등 (광역-기초) 시도비 보조금, 조정교부금 등

### < 3세션(재정사업 전달체계 개편) - I. R&D 투자 융합연계 >

□ 자율주행차,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재편, 기술융복합 가속화, 기존 연구 한계 극복 및 기술적 난제 도전 등을 위해 R&D 투자의 융합연계 필요성 대두

- 지난 10년간 융합R&D은 양적성장을 달성하고, 일반R&D 대비 높은 성과를 창출했으나,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감소 추세\*

\* 융합R&D 투자액(억원) : ('10)12,200 ('18)23,000 (+88.5%)  
일반R&D-융합R&D간 성과 차이(과제당 기술료, 만원) : (일반)7,830 (융합)8,380  
과제당 투자액(백만원) : ('16)277 ('17)248 ('18)229

- 중장기 융합사업계획(기본계획)은 과기부 등 부처별 관심사에 따라 분절적으로 작성\*하여 시너지효과(기술개발 후 산업에 적용 등) 미흡

\* 융합관련 3대 기본계획 : 융합기술발전전략(과기정통부),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(산업부),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계획(과기정통부)

- 경인사연(정책)과 과기연(기술) 간 R&D 교류플랫폼이 미흡하여 연구미션 설정, 협력대상 선정 등 연구원간 화학적 융합에 한계

□ 개선방안으로 ESG 관점(①책무성, ②효율성, ③투명성)의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성과 창출

- ①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R&D 미션을 선정하기 위해 경인사연(정책), 과기연(기술)을 포괄하는 융합연구 추진체계 마련

\* 미션선정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시에도 정책 및 기술연구기관 전문가 동시 참여

- ② R&D 사업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R&D 기획단계부터 기술 수요자인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

\* 성과물을 활용하는 민간기관이 제안과정부터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수요를 반영 하도록 하되,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 민간기업 리스크 최소화

- ③ 출연연, 대학, 기업 등 상호간 협업강화방안 마련\*, 해외 연구자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문제해결력 향상

\* 과기출연연 기관 미션과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국책연구사업간 연결 강화



### < 3세선(재정사업 전달체계 개편) - II. 아동 돌봄안전망 >

□ 아동 돌봄안전망은 부처별·사업별 분절적 운영으로 지역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공급 격차 및 현장수요 반영 미흡 등 사각지대 발생

○ 유아교육·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공급률\*은 높은 수준이나, 도서·산간 지역은 공급부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존재

\*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(보육시설 미이용)을 제외한 이용률은 120% 초과, 전체 영유아 인구 대비 이용률은 90% 수준

○ 방과후돌봄은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, 제한적 선정기준(맞벌이·저소득 등), 상이한 지원기준(인건비 등), 지역 간 공급 격차\* 등으로 체감도 낮음

\* 이용 의향을 고려한 공급률(기초지자체 단위)은 수도권·도서지역이 현저히 낮음

□ 개선방안으로 ①지역별 수요-공급에 기반한 아동 중심 성과관리, ②아동돌봄통합패키지 도입, ③돌봄 우선순위 일원화, ④중앙-지방 역할재정립 등 제안

① 지역별 돌봄 수요-공급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구상한 모델\*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, 공급량·공급방식이 아닌 아동발달성과·만족도 중심으로 성과평가

\* 아동인구 및 공급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및 이에 따른 사업방식 설계 (예 : 아동인구多·공급少 유형 → 돌봄공급을 위한 다자협력, 시설확충, 가정돌봄 지원 등)

② 모든 아동의 개인별 보육·돌봄계획 수립 및 이에 기초하여 수당·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“아동돌봄통합패키지” 도입

\* 부모가 신청서 작성(양육환경·돌봄수요 등 포함) → 지역 단위 돌봄기관·인력 등 총량 확인 → 아동별 1~3순위까지 서비스 매칭 결과 제공(가족이 최종 선택)

③ 시설별 대상 선정기준(맞벌이 등)을 폐지하고, 돌봄 우선순위 통일 및 지자체는 지역 내 돌봄공급량에 기초하여 돌봄기준선 설정

\* 돌봄우선순위 : ①시설보호아동, 조손가족 및 유기방임 아동 → ②기초생보 수급아동 등 → ③장애아동 등 → ④맞벌이가구 아동 → ⑤돌봄필요 일반가구(1명 전일제, 1명 교육·훈련·간병) (지자체는 각 지역 여건에 따라(예 : ④번까지) 돌봄 우선공급 기준선 결정)

④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 및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 마련,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계획수립 후 돌봄 실행